

시론



신 준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금융기관의 핵심 경영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기관에 업무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안전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을 단순한 전산시스템 침해 문제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AI는 취약점 탐색, 악성코드 분석과 작성, 피싱 메시지 생성 등을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다.

실제 금융보안원은 2026년 9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격 시도가 현실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위험으로 등장한 것이다.

AI 해킹의 또 다른 특징은 공격 대상이 시스템에서 사람과 조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는 금융기관 직원의 이메일이나 안내문을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고, 딥페이크와 음성합성 기술은 사람의 신뢰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격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사칭해 송금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AI 에이전트 금융 해킹, ‘AI 내부통제’가 답이다

면 기존의 보안시스템만으로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보안 문제를 관리회계와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내부통제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오류와 부정을 예방·발견하는 데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통제 대상이 사람과 전산시스템을 넘어 ‘AI의 권한과 판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누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AI가 어느 시스템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수행할 업무를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직무분장의 원칙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하나의 AI가 거래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한 뒤 의사결정과 업무 실행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내부통제에서 강조해 온 승인·기록·보관·집행 기능의 분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효율성을 이유로 AI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른바 ‘AI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요 금융거래와 신용평가 등에는 반드시 사람의 승인 절차를 두고, AI의 데이터 접근 기록과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감사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AI 행동이나 데이터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AI 레드티밍(AI Red Teaming, 일부러 공격자처럼 AI 시스템을 시험해 취약

점을 찾아내는 보안 점검 방법)을 통해 공격자의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안원도 AI 레드티밍과 기술적 통제, 내부통제를 결합하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자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뒤 전산담당자의 실수나 외부 공격자의 책임만을 이야기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수준, AI 시스템의 권한, 고객정보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AI와 정보보안은 이제 전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필요가 있다. 대형 금융기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인력과 투자가 부족한 중소 금융기관에도 AI 보안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별 AI 위험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금융보안원이 금융 AI 보안지원센터를 공동하고 AI 보안 전담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신뢰’다. AI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일수록 이를 통제하는 제도와 책임 또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가”보다 “AI를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금융혁신은 기술의 혁신과 ‘AI 내부통제’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할 수 있다.

기고



한 승 훈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개막해 개최 중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된 메가이벤트다.

수 년간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서 지역 관광·MICE 업계는 활발한 방문객 특수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해진 일련의 외교적 차질과 이로 인한 일부 참가국 기관들의 불참 소식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아쉬움과 함께 깊은 성찰의 과제를 던져줬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의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 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각 차이는 결국 중국 측 전시 인력의 철수와 섬박람회 참가예정이었던 중국 저우산시의 불참, 그리고 광주우시 대표단의 교류 일정 취소로 이어졌다.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칭을 둘러싼 협의와 조정 과정의 혼선이 동북아 정세의 민감한 기류와 맞물리면서 예기치 못한 여파를 낳은 것이다.

특히 지역 미래 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앞릴 소중한 기회가 다소 위축된 점은 국제 행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메가이벤트의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광산업적 측면에서 비엔날레와 세계섬박람회 같은 글로벌 메가이벤트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방문 수요를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관광·MICE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메가이벤트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외교적 리스크 스크리닝 체계와 위기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장치가 충분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특정 전시관의 명칭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섬박람회와 의회 교류, 지역 산업 방문 등 다른 영역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된 현상은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형 국제행사를 추진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할 행정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관광·MICE 도시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늘 직면하지만 사전 대응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통해 참여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을 예방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세밀한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차원의 단일 소통 창구(Single Voice)를 통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진통이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성숙한 글로벌 관광·MICE 도시로 도약하는 반면교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보완을 제안한다.

첫째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

MICE 및 메가이벤트 위기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지정학적·사회적 리스크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지자체장 직속 ‘공공외교 및 위기관리위원회’ 신설과 중앙부처 협력 강화다. 국제관계대사, 관광·MICE 전문가, 외교부·문체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 위원회를 통해 주요 메가이벤트의 사전 스크리닝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어 3단계 리스크 대응 프로토콜 정립이다. 돌발 이슈 발생 시 다른 관광·행정 영역으로 여파가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분리·차단하고 공식 대변인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지표(KPI) 다변화다. 단순히 방문객 수나 참가국 수 등 외형적 수치 평가를 넘어,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한 관광·MICE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글로벌 관광·MICE 도시로서의 위상은 외형적 이벤트 유치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참여 주체 간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세련된 운영과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의 품격이 완성된다.

이번에 겪은 성장통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와 지역 경제권에 한층 더 정교하고 견고한 MICE·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깨 상담·치료를 통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자진해 신고한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대인관계와 학교생활까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빛 독욕이나 개인정보 악용 등 또 다른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단속과 함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특별시 첫 국감, 실질적인 성과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광주·전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성적표를 평가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합특별시청을 비롯해 법원·검찰·경찰·교육청, 대학병원과 에너지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감사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 국감은 100일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광주시·전남도 현안은 물론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 성과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기관별 업무 점검을 넘어 통합 이후 행정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달라진 행정 서비스와 재정 효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국감에서 의료와 에너지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8일 실시되는 전남대학교병원 감사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응급의료 체계, 의료인력 확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대 설립 등의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RSV 예방접종 지원책 강구해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유행철을 앞두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S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주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을 보호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이 저출생 영향으로 영유아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향후 몇 년간은 영유아 수가 감소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RSV는 영유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는 감염 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국내에서는 영아의 RS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지속형 단클론항체인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맵)’ 등이 사용되고 있다. 백신과 달리 예방항체를 직접 투여해 일정 기간 RSV 감염에 따른 중증화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엔플론시아(클래스로비맵)’가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RSV 예방 주사 선택이 확대됐다.

만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개선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1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다.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이 감사 대상에 올라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및 이전 효과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공사계약 관련 규정 개선 등의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감 대상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파악한 후, 잘못된 분야는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정부의 지원책이 함께 제시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국감 대상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국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RSV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이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전남광주 지역 베이포투스 비용은 1회 기준 50만원 안팎에서 최대 60만원 수준이다. 출산 이후 예방접종과 육아용품 등 각종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보호자 입장에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최근 국내 기업의 예방항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RSV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영아를 대상으로 질병 특성과 예방 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가득이나 저출생 문제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가 정책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RSV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